

인문학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박 거 용 |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I. 인문학 위기의 향존성

인문학을 문학(예술)·사학·철학과 그리고 종교학·인류학·심리학·사회학 등 사회과학 가운데 인문학과 그 본질이 유사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인문학 위기' 담론은 군사정권이 끝나고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 민간인 정권이 시작된 때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군사정권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군사독재'와의 싸움에 급급하였다면, 민간인 정권부터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인문학의 한계에 인문학의 효용성에 대한 요구가 겹쳐져서 '위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을 학문 분야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그어서 분과 학문 가운데 기초학문, 또는 응용학문이 아닌 순수학문이라고 편의상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인문학은 정의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삶의 기본 자세, 사람답게 사는 도리,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물 사이의 의미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일단 정의해 보자.

인문학은 사람다움의 당위와 그것의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규범적이며 실천적이고, 그 당위와 실현의 정당성과 가치와 의미를 항상 문제제하기 때문에 비판적이며 반성적이다. 또 인문학은 대상

에 대한 지식보다 인식 주체의 변화를 자신의 역사 속에서 상대화하는 작업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적이고 전체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인문학의 위기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그 연구 방법 정립이 어려운 인문학에 이미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다움의 이념을 항상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인간의 삶 속에도 이미 내재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의 위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인문학의 위기는 다른 차원에서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와 WTO체제 출범,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삶의 전 영역을 이룬 추구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자본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이자 자본축적의 전략으로 표면화되면서, 지식의 중상주의화도 노골화되었다. 이제 대학에서도 '그것이 진리인가'라는 질문은 점차 듣기 어렵게 되고 '그것은 잘 팔리는 지식인가' 하는 앵무새 소리만 메아리칠 뿐이다. 그래서 인문학 위기뿐만 아니라 돈 안 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제 대학에서는 '경쟁력'과 '유연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찌면 '인문학의 위기'만이 아니라 '학문의 위기', 더 나아가서 '대학의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90년대에 중국에서 활발했던 '인문정신' 토론을 정리하면서 왕효명은 '인문정신', 즉 인문학의 위기 논쟁이 "정의감과 도덕감이 보편적으로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미미해졌고, ……인간에 대

“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국가 고등교육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인문학 내부의 안이한 전공 함몰주의와
그에 따른 현실 대처 능력의 상실 등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 현실을 우리의 이론에 의해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서 더욱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 이해가 나날이 좁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개념이 갖는 풍부함을 엄중하게 상실한 결과”를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 왕효명은 “20세기는 바야흐로 종결되고, 다국적 자본과 미개발 지구의 각종 세속 권력은 서로 이용하며, 이들 지역의 인민생활 - 육체적 욕망에서 정신 현상에 이르기까지 - 을 조종하는 거대한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엄준한 현실에 직면하여 여하히 ‘세계화’ 흐름이 획정한 시야의 바깥에서,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고, 인간적 생활을 체험하고 상상하며, 인간의 생존의의를 탐구·확인하고, 아울러 여기에 의거하여 개인과 사회의 발전 목표를 다시 새롭게 확립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세기 동안 반드시 답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중국인 면전에 바로 직면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대륙, 세계인의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¹⁾

다시 말하면, 인문학의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인문학 속에 내재해 있으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권에서도 공통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지진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국가 고등교육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인문학 내부의 안이한 전공 함몰주의와 그에 따른 현실 대처 능력의 상실 등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 현실을 우리의 이론에 의해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서 더욱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II. 그간의 인문학 육성 방안

이 글의 주제는 인문(사회) 분야의 육성 방안이다. 그간 10여 년 동안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진단은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연구서들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래서 그 육성 방안도 꽤 많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교육부 산하 기초학문육성위원회가 2001년 4월 발표한 ‘기초학문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이 가운데 ‘인문학 육성 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박찬승, 공동연구자 김남두, 조옥라, 심경호, 오세진, 정호근)와 인문사회연구회 주최 ‘한국 인문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2년 6월)는 그간의 육성 방안을 총망라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간 제시된 육성 방안을 정리하고, 그 육성 방안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직접 관련은 없으나 더욱 중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한다.

1) 백원담 편역, 『인문학의 위기 : 인문의 새로운 길을 향한 중국 지식인의 성찰과 모색』, (푸른숲 : 서울 1999), pp.7~8.

'기초학문 육성 종합 계획을 위한 정책 연구(인문사회 분야)'는 총체적 '문화 역량'을 가진 인문학이 의미지원으로서의 그 위상이 정보사회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몇가지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인문학이 문화적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인문학 교육 강화 방안은 ① 중등교육의 변화와 인문학 박사의 중등교육 참여 등 인문학 교육의 대중적 기반 조성 방안 ② 기초과목 중심의 교양교육 등 대학 교양교육의 강화 방안 ③ 경영학·신문방송학·법학·행정학 등은 전문대학원으로 옮기는 등의 대학 학부제 교육 보완 ④ 최소 수강인원의 철폐와 연계전공의 개발 등 인문학 전공교육 강화 방안 ⑤ 인문학 대학원 운영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학 교육 강화 방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방안은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인데, 이 제도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먼저 그 도입의 조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문학 신진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인력 활용 방안은 대학원생 지원 방안, 강사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 교전 번역 지원 확대 문제 등 인문학 분야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역시 강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인문학 연구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은 인문학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 필요,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등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비 증액과 배분은 비교적 단순한 문제이지만, 인문학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가장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 연구기관의 지원 방안은 ① 대학 부설 '인문학' 기초 분야 연구소 지원 사업 ② 디지털 인문

학 연구소의 설립 ③ 연구중심대학=연구소 육성 중심 대학으로의 개념 재정립 ④ 대학간 공동 연구소 개설 장려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구소의 개설과 그 연구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²⁾

여기다가 국내에 외국에서 나오는 학술 도서를 모두 구비해 주는 전문 사서진을 갖춘 연구 도서관 구축안을 덧붙이면,³⁾ 인문학의 자기 혁신과 제도적인 개혁의 밑바탕이 되는 자생적인, 즉 우리 사회와 역사·문화에 뿌리를 둔 학문(제)생산 구조 또는 인문학(제)생산 구조를 구축하는 필요조건을 모두 망라하는 셈이다.

Ⅲ. 인문학 육성을 위한 몇가지 제언

1. 정부와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학문 정책' 특히 '인문학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정권(군사정권과 민간정권 모두)과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그 통제를 받는 대학은 교육 정책(지식의 전달과 보존 등 재생산적인 정책)과 정원 통제 정책 그리고 입시정책 이외에 구체적인 인문학 정책, 아니 학문정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군사정권은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로 대학을 철저히 이용하면서 정권에 순응하는 주체형성을 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대학은 정권이 주는 당근, 즉 중과·증원에만, 그리고 그에 따른 교세 확장에만 눈독을 들였지 정권의 균형 없는 응용학문 중심 정책이나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 등에 대한 비판과 개별 대학 나름의 독자적 정

2) 기초학문육성위원회, 『기초학문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2000년 11월 9일), pp.15~111.

3) 최갑수, "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초", 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문정책의 방향과 과제』(2000년 6월 14일), p.34.

〈표 1〉 계열별 학생 수, 교원 수 및 학과 수 비교

(단위 : 학과 수, 명, %)

구 분		대학		대학원				학과 수 합계	학생 수 합계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과 수	학생 수	학과 수	학생 수	학과 수	학생 수				
총계	'96년	5,441	1,266,876	4,787	105,742	1,737	20,616	11,965	1,393,234	48,582	28.7
	'01년	9,723	1,729,628	7,880	209,865	2,667	33,405	20,270	1,972,908	43,309	45.6
	증감율	78.7	36.5	64.6	98.5	53.5	62.0	69.4	41.6	-10.9	58.8
인문계	'96년	857	178,181	532	10,030	269	2,497	1,658	190,708	7,846	24.3
	'01년	1,556	232,263	757	21,273	377	3,594	2,690	257,130	6,717	38.3
	증감율	81.6	30.4	42.3	112.1	40.1	43.9	62.2	34.8	-14.4	57.5
사회계	'96년	1,122	327,390	1,248	27,691	349	3,197	2,719	358,278	7,874	45.5
	'01년	2,417	465,999	1,980	55,084	551	5,574	4,948	526,657	6,954	75.7
	증감율	115.4	42.3	58.7	98.9	57.9	74.4	82.0	47.0	-11.7	66.4
자연계	'96년	2,249	562,593	1,865	32,992	915	9,675	5,029	605,260	18,998	31.9
	'01년	3,851	750,046	2,831	54,735	1,378	15,375	8,060	820,156	15,066	54.4
	증감율	71.2	33.3	51.8	65.9	50.6	58.9	60.3	35.5	-20.7	70.9
의약계	'96년	217	45,601	150	7,191	90	4,019	457	56,811	7,366	7.7
	'01년	339	62,992	250	12,804	148	6,164	737	81,960	8,916	9.2
	증감율	56.2	38.1	66.7	78.1	64.4	53.4	61.3	44.3	21.0	19.2
예체계	'96년	524	90,582	301	6,285	33	402	858	97,269	3,606	27.0
	'01년	1,050	149,878	639	15,016	89	1,150	1,778	166,044	3,280	50.6
	증감율	100.4	65.5	112.3	138.9	169.7	186.1	107.2	70.7	-9.0	87.7
사범계	'96년	472	62,529	691	21,553	81	826	1,244	84,908	2,892	29.4
	'01년	510	68,460	1,423	50,953	124	1,548	2,057	120,961	2,376	50.9
	증감율	8.1	9.5	105.9	136.4	53.1	87.4	65.4	42.5	-17.8	73.4

- 학생 수는 재적 학생 수이고, 교원은 전임 이상 교원이며, 계열별 교원은 교원의 전공별 계열을 의미함.
- '96년 교원은 조교를 포함한 수이나, 조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었음.
-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통계연보」 참조(산업대, 교육대 제외)

책을 세울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민간정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자체가 통치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군사정권의 교육 이데올로기를 대체했을 뿐 별반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인 정부는 효율성, 경쟁력 그리고 유연화를 구호로 내세우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육의

'손과 발'이 아니라 '머리'를 자처하면서 대학을 통제하고 동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학문 정책의 큰 틀만을 제시하고, 개별 대학의 자율과 자치 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대학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장기적인 학문정책, 특히 교양교육과 인문학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 그 역량을 현실화하지 못한 개별 대학은 또다시 정부의 정책에 끌려다

“

객관식으로 '정답'을 찾는 수능시험은 인문학의 발전에 독약과 같은 것이다.
 정답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정신이 비판 정신에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하고 연대하는 정신을 육성하는 것이다.

”

니면서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만 급급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 현재 우리 대학의 학생 수는 1,972,908명이고, 교수 수는 43,309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5.6명이다. 필자가 지난 '96년 '인문학의 위기'를 거론한 글에서 작성했던 표와 비교해서, IMF 지배체제를 겪고 학부제를 실시하고 BK21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사이에 학생은 60여만 명이 늘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통계상의 특징은 인문계 학생 증가율이 가장 낮으며(인문계 34.8%, 사회계 47.0%, 자연계 35.5%, 의약계 44.3% 등. 특히 박사 과정은 인문계 43.9%, 사회계 74.4%, 자연계 58.9%, 예체계 186.1% 등 인문계가 가장 적게 늘어났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문계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2001년 기준 인문계 1:38.3명, 사회계 1:75.7명, 자연계 1:54.4명, 의약계 1:9.2명, 예체계 1:50.6명, 사범계 1:50.9명). 인문계열 전공 학생 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계학적으로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 그리고 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규모에 적절한 인문학 전공학생 수, 인문학 기초 교육 수준, 인문학 대학원 규모, 인문학 분야 교수

수 등의 가이드 라인이라도 제시하고 이 방향으로 대학을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대학생의 5%, 약 3만 명이 컴퓨터 과학, 비즈니스 연구에 이어 세 번째로 영어영문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⁴⁾ 인문학에 대한 국가의 정책 없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 물론 이때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통제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개별 대학도 이제는 대학의 개성 있는 학풍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응용학문에 방점을 찍더라도 인문학과 기초과학 등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원 체제의 구축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원은 어떠한가? 대학원에 대학원 전담교수제도가 없다는 것은 대학원이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고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장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대학 모두 입다물고 쉬쉬하고 있다. 이 침묵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 대학은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사실 인문계 박사과정 학생이 가장 적게 늘어난 이유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지원정책, 그에 따른 국내 학위 위상의 추락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함께, 객관식 위주의 수능시험제도의 개선도 필수적이다. 객관식으로 '정답'을 찾는 수능시험은 인문학의 발전에 독약과 같은 것이다. 정답 앞

4) Robert Eaglestone, *Doing English : A Guide for literature student*, (Routledge : London, 2000), p.1.

〈표 2〉 미국 공·사립 대학 교수 연봉 현황

(단위: 달러)

구분	사립	공립	구분	사립	공립
법학	108,450	99,429	철학	57,384	57,014
공중보건	89,706	59,302	역사	56,489	56,410
화학공학	82,878	82,254	수학	56,343	58,497
일반공학	77,491	72,101	일반심리학	55,263	59,164
경영학	73,913	76,115	사회학	54,992	56,020
경제학	71,023	70,458	생물학	54,516	57,287
회계학	70,128	73,960	영문학	53,413	51,075
치의학	66,212	75,012	다학제간 연구	52,781	55,990
물리학	65,064	65,799	외국어문학	51,721	49,713
인류학	62,582	58,354	교육학	50,655	56,155
컴퓨터정보과학	60,914	67,988	음악	49,306	51,182
지역, 민족, 문화연구	58,586	59,404	시각, 공연예술	48,703	51,681
화학	57,440	61,907	영어작문	43,656	44,792
생명공학 및 생의학공학	79,857	72,250	전체평균	58,700	59,123

▪ 이 연봉은 2000~2001년 현재, 모든 전임교수의 평균이며, 이 수치는 366개 4년제 주립대학 124,519명, 531개 4년제 사립대학 63,520명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이 수치는 9~10개월 계약 교수도 포함한다(이 표는 80여 개 분야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것임).

▪ 자료: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Almanac Issue 2001-2, August 31, 2001, p.26.

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정신이 비판 정신에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하고 연대하는 정신을 육성하는 것이다.

2. 정부의 교수 계약제·연봉제 도입과 산업 교육진흥법(안), 그리고 학부제 도입과 BK21 사업 등은 '인문학 위기'를 심화할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용하는 교수에 대한 계약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연봉제 실시를 확정하였고, 최근 산업교육진흥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정책 모두가 인문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이 정책 모두가 인문학의 위기 내지 인

문학의 왜소화와 위상 하락을 부채질하는 대학 풍토를 조성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이 정책 모두가 대학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처럼 운영하거나 아예 대학기업을 장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제는 교수 업적 평가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실시할 것인데, 인문학이 교수 업적을 계량화해서 평가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 재단의 권한이 막강한 사립대학에서, 부정과 비판의 정신이 가장 강한 인문학은 그 예리한 비판적 속성을 잃거나 감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학의 지배 구조가 온존하는 한 인문학은 미래가 있을까?

이어서 연봉제는 업적 평가에 의해 연봉을 책정할 것이다. 〈표 2〉는 우리가 그렇게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미국의 봉급 상황이다. 이 표는 미국 전체

대학 전체 교수를 상대로 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대학 교수 봉급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대학간, 그리고 직급, 호봉 간 봉급의 차이는 있지만 전공 분야별 봉급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전공 분야별 봉급 차이는 2배 이상이 되며, 인문학 과목은 거의 다 전체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립이 공립보다 평균적으로 봉급 수준이 낫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만일 우리나라 대학이 연봉제를 도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뚜렷해진다면, 인문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교육진흥법(안)은 첫째, 대학 내 산업협력 전담기구인 '산업협력단'을 설치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공립 대학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독립채산제로 '경영' 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학교기업' 운영을 양성화하는 것이고, 셋째는 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 유치(협동연구소)를 허락하여 대학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1990년 5월,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대학교수협회의 회의에서 일군의 학자들이 학문적 자유에 대한 기업의 위협이 점점하고 있지만, 대학 당국에서 학문적 자유를 방어하려는 명시적인 노력을 하기를 꺼려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한 사람 중에는 브라운 대학의 메모리얼 병원 산업보건 분야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켄(David Kern)이 있었다. 1996년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나일론을 미세하게 만들어 내는 마이크로화이버스(Microfibres)의 고문을 말

고 있던 켄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심각한 폐질환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업은 켄이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유지 계약을 들먹이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켄이 구한 정보는 자원자들에 대한 시험을 통해 얻어졌고, 재산상의 비밀이라기 보다는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브라운 대학도 역시 마이크로화이버스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켄의 발표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에 분노한 켄은 결국 발표를 했고, 1997년 질병조절센터는 공식적으로 미세섬유 노동자의 폐질환(flock worker's lung)을 새로운 병으로 인정했다. 마이크로화이버스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켄은 브라운 대학에서 자리를 잃고 말았다. "대학은 학문적 자유의 잠식으로부터 교수들을 보호해야만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업의 자금이 대학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런 일은 없어져 가고 있다."고 켄은 말했다. 미국대학교수협회의 회의에 참석한 몇몇 교수들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했지만 이런 사실은 문제가 얼마나 퍼져있는지를 조금만 암시할 따름이다.⁵⁾

윗글에서 보듯이, 대학이 기업화되고 기업의 자금이 대학에 들어올 때, 학문의 자유는 잠식되거나 일단 유보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하려는 켄 교수 같은 사람보다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방침을 따르면서 연구 결과를 고치거나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풍토가 심화될 때에, 학문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고 연구 결과를 공개·공유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연구 결과가 이공계의 그것보다 더욱 애매모호하게 이해관계와 권력에 의

5) 김병윤 옮김, "닫혀진 대학",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p. 42. 이 글은 Eyal Press & Jennifer Washburn 이 *Atlantic Monthly* Vol. 285, No. 3, March, 2000 pp. 39~54에 실은 'The Kept University'를 옮긴 것이다.

“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응용학문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개별 사립대학이 대학을 기업화하는 쪽으로 뒤따라갈 때,
 여기에 제동을 걸고 대안을 제시할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는 정부도 사학재단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인문학자들인 것이다.
 인문학자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새로운 지식 생산 양식을 구축할 때
 인문학은 정부와 재단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

해 조작될 가능성이 큰 인문학은 학교 당국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의 압력에 투항할 수밖에 없고 연구 결과의 비밀주의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 주식회사'는 인문학을 교사시키거나 멸시하는 풍토를 지배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부제 졸속 추진과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인 BK21 사업 강행이 인문학에 가져다 준 피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부제의 졸속 추진은 정부의 막강한 권력과 개별 대학의 무능함, 그리고 자치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대학원 중심 대학에 장려할만한 학부제는 강제 사항이 되었고,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간의 격차를 고착화하면서 그나마 교양 필수였던 인문학 교육마저 침몰하게 만들었다.

또 BK21 사업은 근본적으로 응용과학 중심 지원 사업으로서, 국립대 중심, 서울지역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BK21 사업은 '99년 여름 교수단체의 반발과 비판 때문에, 인문학 지원 대상을 한국학, 문화, 동아시아, 사회발전, 정보·지식기반 사회 등 한정된 분야에서 인문사회 전 분야로 재공고 한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프로젝트 중심의 대규모 사업이 인문학 정신을 어떻게 질식시키는가를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사업은 주문생산 체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정된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연구 결과를 끌고 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인문학 지원정책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하고, 정부의 정책과 인문학 연구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3.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 모든 학문, 특히 인문학 발전의 토대이다

시간강사 제도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이 인건비 착취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시간강사 대부분이 교양교육, 즉 인문학 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강사 제도의 개선은 인문학 발전의 토대를 세우기 위하여 중요하다.

여기서 최근 임금단체 협약을 맺은 영남대(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사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학이다. 전국강사노조는 '95년 이미 합법화되었으나 활동은 합법화 이후 오히려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조 경력이 전임교수가 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강사노조가 최근 '한국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계약제 실시 이후, 모든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의 사례를 살펴보자.

영남대는 약 650여 명의 정규직 교수(강의 담당 53%)와 약 720여 명(이 가운데 음대·미대가 250

여 명, 인문사회계가 약 300여 명 정도이다)의 '비정규직 교수' (강의 담당 47%)가 있는데, 정규직 교수 임금 총액이 600억 원(최근 3년간 14.6% 임금 인상, 약 100억 원)이고, '비정규직 교수' 임금은 약 60억 원(44% 임금 인상, 약 10억 원)이다. 즉, '비정규직 교수' 들은 정규직 교수보다 숫자는 많으나 임금은 10분의 1 수준도 못 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비정규직 교수' 들은 2002학년도 임금협약을 맺었는데, 강사료는 29,000원에서 32,000원으로 체결되었으며 이 금액은 사립학교 가운데 최고 금액이지만 국립대학 강사료인 34,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것이다.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조건은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교원으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학 교원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문제는 정부의 무대책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문제는 사학이 일종의 강사료 담합 조치에 의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문학뿐만 아니라 학문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서 '비정규직 교수' 를 인정하고, 사립학교가 학교를 영리 수단으로 생각하는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IV. 인문학과와 인문학자의 자기 혁신이 인문학 발전의 밑바탕이다

지금까지 인문학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면, 인문학 전공 학생이 줄어들고 그래서 관련 학과가 위기를 맞고 그로 인하여 학과 교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인문학이 죽을까? 대학 밖으로 나가면,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그 영향력이 정권의 교육정책에 태풍을 몰고 와서 대학을 주식회사화 하도록,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

는 방향으로 몰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이 필요 없어질까?

인문학이 기초학문적 성격으로 인해 그 경계선과 명칭을 바꿀지는 몰라도 - 다시 말해서 그 '교환가치' 를 강조하고 '부가가치' 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인문학이 학문간의 경계선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생산하는 힘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 보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계획해 보자.

앞에서 거론했듯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인문학을 말살하며, 응용학문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개별 사립대학이 대학을 기업화하는 쪽으로 뒤따라갈 때, 여기에 제동을 걸고 대안을 제시할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는 정부도 사학재단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인문학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 인문학과와 인문학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무관심 또는 체념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대학의 지배구조와 그 정책과정에는 또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였는가? 자신의 전공에 탐닉하고 타학문 간의 대화에 벽을 쌓지 않았는가? 인문학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방안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인문학자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새로운 지식 생산 양식을 구축할 때 인문학은 정부와 재단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박기용**

박기용

서강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어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러시아 형식주의』, 『미국문학사상의 배경』, 『자신을 거부하는 문학』 등의 번역서가 있으며, 미국 소설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